
“첫걸음부터 함께 하는, 모두의 미래를 위한”
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

2025. 9. 22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	8
III. 단계별 추진과제	11
1. 사회 진입 “사회 첫걸음”	11
2. 자립기반 마련 “안정적 자립”	23
3. 사회 참여 “정책·사회의 주체”	32
IV. 향후 계획	36

I. 추진 배경

1 청년의 삶 현황 및 여건

◆ 청년층 고용 여건은 지속 악화

- **(체감실업률)** 기업의 채용규모 축소, 경력·수시 채용 추세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*은 지속 악화 추세

* 청년(15~29세) 고용률(%) : ('21.8) 45.2 ('22.8) 47.3 ('23.8) 47.0 ('24.8) 46.7 ('25.8) 45.1
청년(15~29세) 실업률(%) : ('21.8) 5.8 ('22.8) 5.4 ('23.8) 4.5 ('24.8) 4.1 ('25.8) 4.9

- **(쉬고 있는 청년)**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'쉬고 있는 청년'의 규모*도 지속 증가

* 쉬고 있는 청년(만명) : ('20) 44.8 ('21) 41.8 ('22) 39.0 ('23) 40.1 ('24) 42.1

◆ 첫 취업, 독립, 결혼 등 성인기 이행과정 지연

- **(사회진출 지연)** 첫 취업 소요기간 지속 증가 추세*, 학업 종료 후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

* 첫 취업 소요기간(개월) : ('15) 10.0 → ('20) 10.0 → ('24) 11.5 (통계청)

- **(독립·결혼 지연)** 주거 등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으로 절반 이상 청년이 부모와 동거*중('24. 54.4%), 초혼 연령도 지속 상승*

* 초혼 연령 : ('90) 남 27.8세, 여 24.8세 → ('24) 남 34.0세, 여 31.5세 (통계청)

◆ 자산격차 확대와 주거 부담 증가

- **(자산격차)** 저성장 기조 추세下 중장년 세대 대비 소득 증가율 둔화, 자산형성 기회 제한 등으로 세대간 및 청년세대내 자산격차 심화*

*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('24) : ▲(전체) '20. 3.6억 → '24. 4.4억(+23.7%)
▲(39세 이하) '20. 2.2억 → '24. 2.2억(△2.53%)

- **(주거 부담)** 청년들 대부분이 임차(81.1%) 거주, 월 소득의 17.4%를 주거비(월 임대료)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*

*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('23) : 일반가구 3.6% vs 청년가구 6.1%(국토부 주거실태조사)

2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경과와 평가

◆ 「청년기본법」 제정 등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

- 「청년실업해소특별법」 제정('04), 청년 실업대책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
- 「청년기본법」을 제정('20.2), 일자리, 주거, 교육·생활, 참여 등을 망라한 범정부 청년 종합대책 수립, 청년의 권리보장, 국가 책무 등 법적 근거 마련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('20.9),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('21.6), 9개 주요부처 전담과·팀('21.9) 등 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
- 청년위원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, 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 등 청년의 정책 참여 제도 도입 등 제도화

◆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청년정책 제도화

- 「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*」('21~'25) 수립('20.12)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,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·입체적 접근
 - * ▲일자리 ▲주거 ▲교육 ▲복지·문화 ▲참여·권리 5개 분야로 정책 체계화 및 확대
- 청년정책이 특화된 국가정책 영역으로서,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*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
 - * '25년 35개 부처·청에서 339개 사업, 광역·기초지자체에서 2,000여개 청년사업 추진중

◆ 청년정책 5년차, 질적 제고를 위한 혁신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

- 범부처 청년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,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*
 - * 대표정책 부재, 복잡·상이한 지원 요건, 제한적인 수혜 대상과 한정적인 지원 등
-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은 지속되는 가운데, 산업구조 급변, 인구·기후 등 복합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새로운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
-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의 질적 혁신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시점

👉 **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정책 집중 추진 및 정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**

※ 국정과제 89.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

〈 청년들의 목소리 〉

❖ 분야별 청년·전문가 간담회,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(1,000명, 5월) 및 FGI 조사(7월), 국정기획위 청년소모임(7월), 총리 주재 「미래대화1·2·3」(7,9월)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 진행

1. 청년들이 느끼는 '청년'

* 청년 정책방향 설문조사('25, 청소년연)

- ☐ **(현재 삶의 의미)** 청년들은 현재의 삶을 '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(28.8%)', '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(16.8%)'로 인식
- ☐ **(성인의 조건)**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(41.1%), 첫 일자리를 가졌을 때(24.4%)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
- ☐ **(가장 큰 어려움)** 청년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, 창업, 근로 환경 등 일자리 문제(53.6%), 다음은 주거(23.3%)라고 생각

2. 청년들이 느끼는 '정책'

* 청년정책·이슈 토크아보기('23, 청년재단)

- ☐ **(정책경험)** 절반 이상의 청년(56.3%)은 청년정책 지원 경험 부재
* 청년정책 지원 경험('23, 청년재단) : 경험 없음(56.3%) > 경험 있음(43.7%)
- ☐ **(가장 도움되는 정책)** ①구직활동 지원(34.9%), ②청년형 장기적금(12.7%), ③교통비 지원(11.7%) 등 생활밀접 정책을 가장 도움되었다고 인식
- ☐ **(청년정책 방향성)** ①청년의 안정적 자립 지원(49.6%), ②경제적 부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(46.0%), ③모든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 기회 제공(45.0%) 등 자립·사회진입 등 이행과정 지원을 중점 인식 ※ 복수 선택
- ☐ **(인식·체감도)** 중앙부처·지자체 등에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으나, 오히려 정책 인식과 체감은 부족한 상황

[청년들의 목소리(간담회·FGI, 3~8월)]

- "여기저기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 오히려 무슨 정책인지 알 수가 없어"
- "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연계가 없어 정책이 '일회적 이벤트'에 그칠뿐"
- "아는사람만 아는 정책, 알아도 자격 기준이 장벽"

II.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

비전	"첫걸음부터 함께,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"
추진전략	❖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❖ 지역 역할 강화 및 민간 연계 확산 ❖ 청년 눈높이 소통 및 홍보 강화
핵심내용	❖ (기회보장)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 ❖ (기본생활 지원)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❖ (권리확대)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
단계별 추진 과제	① [사회진입] 모든 청년의 사회 첫걸음 보장 ❶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'괜찮은 일터' 확산 ❷ '쉽'에서 '회복'으로, '회복'에서 '재진입'으로의 기회 마련 ❸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·일경험·교육의 질 제고 ❹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❺ 청년의 다양한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❻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
	② [자립기반 마련] 안정적 자립·정착을 위한 기본생활 지원 ❶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 ❷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 ❸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❹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❺ '일상에서 위기까지'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
	③ [사회참여] 청년이 주체가 되는 사회 구축 ❶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❷ 온·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와 체감도 강화 ❸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

1 추진 전략

1.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

- ☐ **(모두의 청년정책)** 저소득·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
- ☐ **(핵심사업 집중)** 청년들의 수요·만족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화·패키지화 등을 통해 정책체감도 개선
- ☐ **(생애주기 지원)**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접근이 아닌 ▲사회진입 ▲노동시장 안착 ▲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생애 과업과 정책연계 강화
- ☐ **(청년 당사자성)** 정책 과정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여,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·제안하여 정책 반영

2. 지역·민간으로 청년정책 기반 확산

- ☐ **(지역 역할 강화)** 청년과 가장 밀접한 일선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체계적 협업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정책 강화
- ☐ **(민간과의 연계 확산)** 청년생활 접점에 있는 기업(일자리창출+ESG), 민간 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로 청년정책 확산 및 체감 제고

3. 청년 눈높이에 맞는 소통·홍보

- ☐ **(소통 문턱 완화)** 청년들이 부담없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*·참여형 행사 등 활성화
* 온통청년에 투표 게시판 등 개설, 청년신문고 활성화 등
- ☐ **(청년 눈높이 홍보)**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,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추천 홍보*, 청년 친화 채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강화
* 온통청년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, 통합상담시스템 등 도입

2 기본 방향

청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①기회보장 ②기본생활 지원 ③권리확대 등 3대 분야에 핵심 대응하고, 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

□ (3대 분야 핵심대응) ①기회보장 ②기본생활 지원 ③권리확대

- ① (기회보장) 학력·지역·자산 등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일, 자산형성 등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첫 기회들을 보장
- ② (기본생활 지원) 국가가 주거, 복지, 교육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책임지고 지원
- ③ (권리확대)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당사자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연대와 통합 제고

□ (중장기 과제 지속 추진) 노동시장 변화 대응, 경쟁 구조 심화, 자산 격차 확대 등 중장기 접근이 필요한 과제 지속 검토·추진

3 단계별 중점 추진방향

「역량개발 및 사회진입 → 자립기반 마련 → 사회참여」로 이어지는 청년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첫걸음부터 미래까지 빈틈없이 지원

- (사회진입) 청년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여 알맞은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- (자립기반 마련) 청년들이 사회진출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·정착할 수 있도록, 주거·자산·생활안정 등 기본생활 지원 강화
- (사회참여) 청년이 정책·사회의 주체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, 정책 참여 제도 내실화 및 강화

Ⅲ. 단계별 추진과제

* 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

1 사회 진입

- ❖ 청년들의 역량개발부터 첫 사회 진입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실패하고 잠시 쉬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보장

1.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'괜찮은 일터' 확산

① 체불·산재·괴롭힘 없는 일터 정착^{노동부}

- (노동법 준수) **신규** 청년 구직자에게 기본을 지키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'체불·산재·괴롭힘 없는 회사'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(26~)
 -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, 채용 기업 대상 노동법 준수 여부(체불·산재·괴롭힘 유무 등) 확인 신청 접수 → 구직자에게 정보 공개
 - 청년에게는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* 제공('25.9), 영세기업에는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('26)으로 법규 준수 지원
 - * 청년들이 알바 구직시 활용하는 당근마켓에도 탑재, 구인공고 관련 즉시 상담 가능
- (안전 일터)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·위험공정 개선, 산재예방 시설·장비 지원 등 일터 안전 강화*
 - * 중소기업장의 유해·위험 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('25. 4,968억원)

②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^{노동부}

- (권익 보호) **신규**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「일터권리보장 기본법*」 제정, 공정 계약 및 노동자 추정 제도 등 마련
 - * (주요 내용) 공정한 계약 체결,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, 보수 적시·전액 지급 등
- (실태 조사) **신규** 개념·범위 등에 대한 문헌·사례 비교 조사 및 기준별 장·단점 연구 선행, 통계청의 정규 통계 조사에 편입 추진('26)

③ 중소기업·지역산단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 노동·중기·산업·문체부

- **(청년선호 복지 확대)** **[신규]**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* 등 추진 검토
 - * (예) 청년일자리강소기업, 비수도권 기업 등 선정 시 우대, 기업근로자 부담에 정부 매칭 지원
- **(근로환경 개선)** **[신규]**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* 지원 검토
 - * 휴게실, 북카페,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
- **[신규]**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*('26.下~) 실시
 - * 청결한 화장실, 흡연구역·흡연기 냉난방 등 '기본적인 근로환경'을 갖추도록 홍보
- **(청년친화 산단조성)** 문화선도산단('25.3개소)별 랜드마크 및 문화 콘텐츠 (공예 오픈 스튜디오 등) 개발 등 청년 유입을 위한 구조 고도화, 재생사업* 지원
 - * 청년문화센터, 아름다운 거리조성,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, 임대기숙사, 체육관, 열린 문화광장 등 교통·문화·편의시설 확충 지원

2. '쉽'에서 '회복'으로, '회복'에서 '재진입'으로의 기회 마련

① '쉬고 있는 청년'에 대한 맞춤형 지원 ('일자리 첫걸음 보장제') 노동부

* '25.9.10. 발표(노동부)

- **(발굴 :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)** **[확대]** 미취업 대학졸업자 뿐만 아니라, 고교졸업자·군장병 대상으로 취업지원 목적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수집을 통해 고용보험DB와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('26.上~)
 - DB정보를 활용하여(실업·훈련 이력 등)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(약 15만명) 하고 위험도·유형을 분류하여 필요 사업 및 담당 부처로 연결*
 - * ▲고립·은둔형(복지부) : 정신건강·일상회복 지원 ▲경로단절형(교육부) : 직업계고 졸업 청년 멘토링·재훈련 ▲반복이탈형(노동부) : 구직·단기취업 반복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
- **(다가가기 : 1:1 접근)** **[신규]**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유도 온라인, 초기 상담 후 지원사업* 연계 오프라인
 - * (예) **청년도전지원사업** : 6개월 이상 실업 등 상태의 청년에게 심리상담·취업상담·구직의욕 회복 등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50~250만원 참여수당 지급('25.1.2만명 → '26.1.3만명)

- **[신규]** '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+센터' 10개소 지정 및 운영비 집중 지원, 지역 내 쉬었음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
- **(회복: 일경험·지속상담)** **[신규]** 사회연대경제*·공공부문을 통한 '쉬고 있는 청년' 대상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하여 '포용적 일경험**' 확대
 - * 사회적기업(노동부), 협동조합(기재부) 등과 연계
 - ** (예) 은둔 경험 청년을 다른 은둔청년의 멘토로 육성, 니트 청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가상회사 운영 등
- 재도전 과정에서 중도포기 방지 등을 위해 마음관리·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 제공,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 등 지속 지원

2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^{노동부}

- **(구직활동지원금)** **[확대]**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*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
 - * 저소득층 취업취약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확대(만원) : ('25) 50 → ('26) 60
- **(구직급여)** **[신규]**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생애 1회 지급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 마련
- **(경력설계 지원)** **[신규]** 규모·업종별 임금분포, 근속기간 정보 등과 연계, 청년들에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일자리선택 및 경력 설계 지원
- **(AI 취업지원)** **[신규]** AI가 개인의 취업 강·약점과 성공확률을 분석, 취업확률을 높일 훈련도 추천하는 AI 1:1 취업지원 제공('25.9~)

3.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·일경험·교육의 질 제고

1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확대^{노동부}

- **[신규]** 청년들이 선호하는 AI·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-채용 연계 강화*
 - * ①기업·대학 등에서 AI·AX 전문인력 양성 훈련(5만명, '26) → ②훈련 종료 후 일경험 연계(2천명, '26) → ③다양한 산업·직무의 AX 인재 채용박람회 추진
- ※ K-디지털 트레이닝(KDT) 확대 개편('25. 4,781억원 → '26. 5,213억원) : KDT 내 Top-tier AI 융복합 과정 신설('26. 1,338억원, 1만명)

※ (예) 청년 선호 직업훈련 과정

- [SSAFY] 삼성전자에서 SW·AI 분야 비전공자 포함 청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**실전형 SW·AI 인력 양성**을 목표로 1년간 **실무 프로젝트 기반 교육** 제공(25. 1,000명)
- [Hy-Po] SK 하이닉스 현직자가 직접 교사, 강사 및 멘토로 참여하는 **고품질 반도체 직무교육** 제공(25. 600명)

-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(25. 76개소)에서 **협약중소기업의 채용수요**를 반영하여 훈련생 모집,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채용 지원

2 AI·SW 등 핵심역량 교육 확대

-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재편·확대하여 청년 60만여명에게
▲학부·대학원생 ▲구직자 ▲재직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

< AI 등 신산업 분야 훈련 주요 사업 >

구분	사업명	주요내용
학부생	[신규] AI·SW 중심대학 과기정통부	▶AI 필수 교과목화,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·SW 중심으로 혁신 * ('26) AI중심대학 10개, SW중심대학 51개
	[신규] AI 단과대 거점대 신설 과기정통·교육부	▶AI 역량이 우수한 KAIST에 우선 설치 (26)하고, 3개 과기원으로 확산 , 교수·학생 정원 확대 ※ KAIST 운영모델을 향후 지역 거점대(교육부) 등에 적용협업 ▶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AI 단과대 신설하여 지역의 AI 교육·연구 거점 으로 육성 ('26. 3개교) ※ AI 단과대-거점대 협의체 구성·운영
	[확대]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	▶대학·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·운영하는 AI 등 첨단산업 단기집중 교육과정 확대 * ('25) 반도체·이차전지·바이오 등, 47개교 → ('26) AI·미래차·로봇 분야 신규 선정, 88개교
대학원생	[신규] AX 대학원 과기정통부	▶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AX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+대학 협력형 AI 융합 특화교육 지원(26. 10개)
	[확대]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 과기정통부	▶ICT 분야 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* 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 * 카네기멜런대 AI심화, 토론토대 AI융합 등 교육과정 : ('25) 80명 → ('26) 100여명
	[확대] 생성AI 선도 인재양성 과기정통부	▶수요자 중심으로 국내 생성AI기업-대학이 공동연구, 석박사생 기업 파견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 * ('25) 84명 → ('26) 216명

구직청년	확대 K-디지털 트레이닝 노동부	▶선도기업 및 우수대학 등과 협력, 기업 프로젝트 기반 AI·빅데이터 등 실무인재 양성 * ('25) 4.5만명 → ('26) 5만명
	확대 AI·SW 마에스트로 과기정통부	▶AI·SW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멘토링과 심화교육 제공 등으로 전문인재 양성 * ('25) 110명 → ('26) 450명
	확대 (가칭) AI 이노 아카데미 과기정통부	▶3無(교재·강사·학비) 기반 혁신 AI·SW 교육 과정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* ('25) 300명 → ('26) 1,200명
재직청년	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 중기부	▶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*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** * ('26) 10만명 ** ('26) 10개 개설
	확대 재직자 AID 집중과정 교육부	▶성인 재직자 대상 'AI+X' 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AID(AI+Digital) 집중과정 지원 확대 * ('25) 30개교 → ('26) 38개교

- AI 분야 핵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초·중·고에서 멘토링 등을 통해 AI 지식·경험도 나눌 수 있도록 지원* (현장 수요 고려, 연간 최대 2만명)

* 국가 근로장학금('26년 교외근로 예정인원 약 8만명)을 활용하여 AI 부트캠프('26. 8,800명), AI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초·중·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활동 등 지원

③ 청년 일경험 등 기회 강화 노동·기재부·국조실

① 민간 기업 노동부

- **신규**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·운영 중인 인턴·일경험·훈련·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협약식('일자리 첫걸음 캠페인') 개최('25.末)

※ 「일자리 첫걸음 캠페인」 추진방식

- (기업) 대·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, 신입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·일경험·훈련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확대 실시(방식 자율)
 - * (예) [현대차: 소프티어 부트캠프] IT·디자인 교육(8주) → 현대·기아 IT직무 채용기회 부여
 - [LG전자: DX School] 빅데이터·AI 교육(6개월) → 우수 수료생 서류전형 가점 부여
- (정부) 참여기업 홍보 및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, 인턴 경험 취업 포트폴리오화 지원 및 취업지원 연계

② 공공부문 기재부·국조실

- **(중앙부처)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* 체계 확립, 단순 일정함을 넘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'정책참여형 일정험 제도'로 발전('26~)**
 - * 청년인재DB에 소부처 통합 채용접수창구 마련, 전공·자격증 등 우대요건 배제한 공정채용 실시 ('25년 하반기 시범운영 중)
- 주도적 직무경험 및 정책참여 기회*를 확대하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진로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
 - * 부처간 연계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, 정책연구모임 및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등
- **(공공기관) 열린 채용*을 통해 청년의 학력, 출신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체험 기회 제공**
 - *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('25.下),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면 도입 여부 검토('26.上)
-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체감형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'26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('25.下~)

④ 대학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확대 교육·산업부

- **(계약학과·정원 확대) 확대 대학-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* 및 계약정원 자율학부** 확대**
 - * 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」 유연화 등 대학의 자율성 제고('25. 181개교 847개 학과)
 - ** 계약정원에 전공자율선택제를 접목하여 학부 단위 계약정원을 선발, 학부 내에서 기업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후 2학년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
- **(현장실습 개선)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* 등을 통해 표준 현장실습 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현장실습 제도 개선**
 - * (예) 양질의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,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유연화 등
- **(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) 국내 제조업을 이끌어갈 공학 인재 대상으로 산업계와 접점을 확대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**

- (학부) **확대** 첨단 공학인재의 美 교환학생 파견 및 첨단산업 현장 경험 지원
 - * 한-미 청년인력교류 : ('25) 480명 → ('26) 540명
- (대학원) **확대**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(석·박사 과정)을 지역 특화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으로 확대 추진(현재 14개소 중 9개가 수도권 소재)
 - * ('26) 지방 소재 대학 6개소 추가 지정 추진
- (박사후 연구원) **신규** 산학프로젝트 지원 사업*('26안. 112.5억원) 신설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산업계 연착륙 지원
 - * AX 분야 중심으로 기업-대학원의 산학프로젝트 운영비·인건비 등 지원(박사후 연구원 100명)

5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간 연계 강화^{교육부}

- 고교부터 (전문)대학까지 직업교육체제간 연계 강화 및 조기 학위 취득 지원으로 청년의 조기 경력개발과 맞춤형 학업 등 지원
- (3+1 전문학사) **신규** 직업계고-전문대간 교육과정 연계, 고교 선이수 과목 학점 인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1년 단축(예:2→1년)하는 교육경로 마련
 - ※ ('26) 직업계고-전문대학 5개교 연계 지원
- (2+3 마이스터 학사) **신규** 산업체 현장 경험(2년 이상)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, 학사학위 과정을 1년 단축(예:4→3년)하는 학위취득 제도 마련
 - ※ ('25~'26) 정책연구 및 모델 개발 등 → ('27) 제도 도입

6 군 장병 역량개발 기회 확대^{국방부}

- (AI·SW 교육) **확대** 군 복무 기간이 미래역량 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('25. 3만명 → '26. 47만명)
- (대학 원격강좌 지원) **확대** 군 복무 기간에도 학업을 연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*('25. 3만명 → '26. 4만명)
 - * ▲(학점) 학기당 6학점, 연 12학점 이내 ▲(참여대학) 189개
- (맞춤형 e-북 지원) **신규** 군 복무 병사의 자기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(80%) 지원(전체 병사 대상 연간 64,000원까지 지원)

4.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

① AI·딥테크 첨단기술 창업 지원 확대 중기·과기정통부

- **(청년창업사관학교) 확대**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(18개소) 內 AI·딥테크 과정 신설*, 글로벌 심화과정 확대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(~'30, 1,500개)
* 창업 학년제 도입 : (1학년) 우수기술 선별·사업화 → (2학년) AI 핵심기술 육성
- **(딥테크 창업중심대학)** 우수 기술역량 보유 대학을 중심으로 '딥테크 창업 중심대학' 지정*(25. 1개소)하여 우수 청년 인재의 딥테크 창업 지원**
* 과기특성화대학(KAIST 등) 중심으로 지정 추진
** 대학의 기술인프라를 연계하여 딥테크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모델 구축
- **(창업탐색교육) 확대** 이공계 석·박사생이 실험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는 창업탐색교육 확대 지원('25. 100팀 → '26. 247팀)
- **(세제지원 확대) 확대**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확대('27~, 기재부 협의)

②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 과기정통부

- **확대** '1인 미디어 콤플렉스*'의 창업·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등 미디어 지망 청년의 성장 기반 확산
*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게 창작 인프라와 창업·사업화 지원(서울 마곡 40개소 입주)
- 전업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(82개팀)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, 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 조성 추진

③ 누구나,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중기부

- **(재도전 지원 확대) 신규**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 경험에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*하는 전용트랙 신설**
* 실패원인 분석,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, 투자유치,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
**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 창업자 대상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지원사업 선정 우대
- **(창업루키 프로젝트) 신규** 전국 창업거점을 활용한 '창업 플랫폼', '창업오디션'을 통해 우수 청년 창업가 '창업 루키' 발굴('26)

- **(원스톱 지원센터)** **[신규]** 초기·청년 창업기업에게 법률·경영 등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 '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' 구축('26)
- **[확대]** 예비창업 지원사업*은 1번만 지원이 가능하나,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**에게는 한번 더 지원 허용
 - *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,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
 - ** 기존의 예비창업 지원사업에서 '우수'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
- **[신규]** 재도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지원* 근거 마련(창업지원법 개정)
 - * 재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
- **(중장년 공동창업)** **[신규]** 중장년의 지식·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청년·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확대*('25~)
 - * (현행)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인 경우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
 - (개선) 창업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과 청년이 공동대표인 경우도 지원 가능

5.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

① **[신규]**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진출 지원^{문체부}

- **(창작활동 지원)** **[신규]** 청년 예술인의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 신설*(K-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)
 - * ▲(대상) 39세 이하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(3,000명) ▲(지원) 지역 문화기반시설·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연 900만원(국비+지방비 매칭) 지원(국비:수도권 60% 비수도권 70%)
- **(K-컬처 해외진출 지원)** **[신규]** 국제문화교류 관심 청년에게 일경험·문화활동 지원*, K-컬처 확산과 청년성장을 함께 지원(K-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)
 - * 해외파견 700여명 활동 및 체제비 지원 추진('26~)
- **(자율기획형)** 청년 주도로 공익적 현지 문화프로젝트 수행(최대 3개월)
 - * (프로젝트 예) ▲(소재) 사물놀이, K-POP 댄스, 영화/드라마 등 활용 ▲(장소) 재외문화원 소재국 대표 축제, 관광명소 등 연계 ▲(활동) 체험 부스 운영, 교육, 버스킹 등 수행
- **(일경험형)** 현지 일경험 사업 및 행정 보조(최대 6개월)

② 청년의 준비된 영농 진입 및 정착 지원^{농식품부}

- **(농지주거 지원)** **확대**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*하고 농촌보급자리** 지원으로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정착 촉진
 - * ▲공공임대용 농지:('25) 2,500ha → ('26) 4,200ha ▲임대한도 상향:(기존) 3~6ha →(개선) 4~7ha
▲선임대 후매도 자원물량 : ('25) 50ha → ('26) 200ha
 - **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·여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생활여건 개선('25. 27개소 → '26. 32개소)
- **(정예농업인재 양성)** 창업이 준비된 청년을 중심으로 영농정착지원금* 지급 및 예비농 멘토링·실습·자금 등 창농 준비지원 도입 추진
 - * ▲영농정착지원금 : 3년간 월 90~110만원 ▲우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: 최대 2억원 연 1.5%
- **(퇴직연금)** **신규** 청년농이 은퇴후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 적립 후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'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*' 도입
 - * 월 납입규모, 정부 지원기준 등 저축 상품설계 및 ^(가칭)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법 제정 등 추진

③ 청년 어업인 육성 확대^{해수부}

- **(청년 어촌정착 지원)** **확대** 청년바다마을* 확대('25. 3개소 → '26. 6개소)를 통해 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 연계 지원
 - * 주거공간 조성, 공동시설 설치, 어촌계 참여 등 지역사회 연계 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
- **(자금 지원)** **확대** 청년 어업인 대상 어촌 정착자금 지원 확대* 등 정착 지원 강화
 - * ('25) 355명 → ('26) 420명 (최대 월 110만원 지급)
- **(일자리 지원)**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*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
 - * 어촌에 양식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('25. 3개소)

4 초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교육부·국조실

- (대학 진로지도 강화) **확대**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을 위해 「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*」 마련 및 「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」 전면 개편
* 대학이 진로지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대학 유형 및 학과별 여건을 반영한 기준 제시
- (갭이어 지원) **신규** 청년들이 학업·일을 잠시 쉬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(Gap-year) 지원 방안* 중장기 검토
* (예) 지역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진로탐색 워크숍, 봉사·체험 등 멘토·지원

6.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

1 지역 중소기업 유입·근속 지원 노동·중기부

- (지역 중기 근속 지원) **확대**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(5만명) 대상 근속 인센티브 지급*(2년간 근무시 480만원),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(최대 720만원)
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: (현행) 빈일자리 업종(10개) 중소기업 취업 청년(2년간 480만원)
→ (확대)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(2년간 480만원, 인구감소지역 최대 720만원 지원)
- (지역 중기 취업 연계) ‘참 괜찮은 강소기업*’(1만개사) 선정, 청년에게 기업정보 제공 및 범정부 취업 연계로 청년층 유입 촉진(~’30. 1만명)
* 일자리, R&D,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·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으로, 노동부 ‘강소기업’과 중기부 ‘참 괜찮은 중소기업’ 사업을 통합 운영(’25)
- 지역내 기업인력애로센터(17개소, 중진공 지역본부) - 전국 고용센터(100여개소) 협업을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직무교육 및 취업 매칭

2 지역 인재양성 기회 확대 교육부

- (지역 인재양성) RISE 체계*를 통해 지역대학이 지자체·산업계·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**
*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egional Innovation System & Education) : 지자체-대학의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·발전을 이끄는 체계
** (예) 충남형 계약학과 : 대학-기업 공동 학생 선발 및 채용 약정 → (1년차) 기초 학습·실무교육 이수 → (2~3년차) 기업 근무·직업능력 고도화(26. 16개 대학 980여명 선발 예정)

③ **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지원** 복지부

-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·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·일경험 지원

※ '25년 기준, 15개 시·도 및 27개 사업단 지원

※ **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**

- (대상 사업)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초기에 **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** 필요가 있는 **사회서비스 제공**
- (일자리 지원) 공모를 통해 선정된 **지역사업단에 인건비 지원**

④ **청년친화도시 확산** 국조실

- **확대**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'**청년친화도시**'를 **매년 3개씩 지정·지원***하여 **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정착 기반 확산**(~'30. 15개 도시)

* 1차 청년친화도시(서울 관악구, 부산진구, 경남 거창군) 선정·발표('25.2)

- 2차 청년친화도시 선정 작업중 → 발표('25.12) → 지정('26.1)

- **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·운영**을 위한 지자체 **교육·컨설팅, 재정지원***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주 여건 개선

* 첫 2년간 2.5억씩 총 국비 5억 지원(지방비 5억 매칭)

※ **1차 청년친화도시 주요 사업**

- (서울 관악구) 서울대 거점 '관악 S-밸리' 등으로 연계하여 **취·창업 아카데미 운영, 고립·은둔청년 대상 청년 치유 힐링팜**(텃밭·경작 등) 운영
- (부산진구) 서면·전포 유희상가를 활용한 **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, 청년상인 공유창고 지원, 청년예술가 전시공간 지원** 등 청년상권·문화 특화 지원
- (경남 거창군) 근대건축문화유산 등 **지역 공간자원 활용한 청년 주도의 기획·운영** 활동 지원,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

2 자립기반 마련

- ❖ 청년들이 사회진출 이후 **안정적으로 자립·정착**할 수 있도록, 주거·자산·생활안정 등 **기본생활 지원 강화**

1.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

① 청년의 초기 목돈마련 지원 금융위·국방부·국조실 등

- **(청년미래적금) 신규**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(5→3년), 정부 기여금 확대(3~6%→6/12%) 등 혜택을 강화하여 청년미래적금 신설(‘26.6)
 - **(일반형)** 연소득 6,000만원 및 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 납입금(최대 50만원)에 정부기여금 6% 매칭으로 자산형성 지원*
 - * 3년 만기 납입시 '원금(1,800만원) + 정부기여금(108만원) + 이자' 수령
 - **(우대형)**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에게는 정부기여금을 12% 매칭* 우대하여 중소기업 인력 유입 등 유도
 - * 3년 만기 납입시 '원금(1,800만원) + 정부기여금(216만원) + 이자' 수령
- **(군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) 신규** 현행 군 복무 병사 대상으로 운영중인 내일준비적금*을 초급간부 대상으로 신설(‘26.3)
 - * 군 병사가 월 최대 55만원 납입시, 정부 기여금을 100% 매칭하여 청년병사 자산형성 지원
 - 초급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월 납입금(최대 30만원)에 정부기여금 100% 매칭 지원*(3년 만기)
 - * (대상) 임관시 장기복무자,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(약 9,500여명)
(만기수령) 원금(1,080만원) + 정부기여금(1,080만원) + 이자
- **(자산형성 연계 강화) 신규** 청년들의 체감도·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5종 세트*간 만기금 일시납 등 연계 지속 추진
 - * 청년자산형성 5종 세트 : ①(일반청년) 청년미래적금 + 중기청년 우대
②(저소득청년) 청년내일저축계좌 ③(군복무청년) 내일준비적금
④(주택희망청년)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⑤(투자희망청년) 서민형 ISA
 - 청년 자산형성 상품 단순화·통합 중장기 검토

② 청년 경제·금융교육 및 컨설팅 강화 금융위·기재·교육부

- **(‘모두를 위한 재무상담’)** **확대** 은행권·서금원 등에서 既운영중인 금융·재무상담*을 모든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으로 확대·개편
 - *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: 서금원·은행권 지점 등 173개소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 재무진단, 재무상담 등 제공중('24.12~)
- **(청년 집중 경제교육)** 청년들이 핵심 경제역량을 개발하고 미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확대*
 - * (예) 경제배움e+에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구축(자산·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), 군장병·대학생·사회 초년생 특화 프로그램 개발(AI 기반 개인 맞춤형 경제 진단 창업 시뮬레이션 재무 챗봇 등)
- 대학 진학, 출산 등 청년 맞춤형 경제·금융 온라인 강좌(K-MOOC)를 제작·확산하고 ‘청년 경제·금융 토크콘서트’ 개최
 - * 전세사기/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 맞춤형 주제로 오프라인 토크콘서트 운영

2.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

① 청년 전·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·교육부

- **(청년 월세지원)** **확대** 무주택·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('22~'27)*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('26.6만명)
 - * 최대 월 20만원(월세), 24개월간 지원
-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주거비 부담 지속 완화
- **(대학생 주거비 지원)**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 맞춤형 주거비(관리비, 공동주거비, 월세 등) 지원*(주거안정장학금)
 - * 월세, 관리비, 공동주거비 등을 포함한 최대 월 20만원 ('26. 2.1만명)
- **(저금리 전세대출)**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(버팀목)을 통해 높은 전세금 부담을 경감,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우대금리(0.3%p) 제공

② 청년 친화 주택공급 확대^{국토부}

- **(공공분양·임대)**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을 적극 공급하고,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품질·서비스 향상
 - 도심 내 노후청사·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청년층 임대주택과 공공청사·생활 SOC 등으로 복합 개발*
 - * 공공청사 + 생활 SOC + 청년 등 대상 중·소형 임대주택(30~84m²)
 - ** '30년까지 수도권 2.8만호(기재부 국유재산심의특 2만호 포함) 착공
 - 청년·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(공유오피스, 피트니스 센터 등)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
- **(기숙사형 청년주택)**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·월세로 공급
 - ※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 파악,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상생모델 발굴 및 사업 확대 여부 검토

③ 안전한 주거 보장 및 주거여건 개선^{국토부}

- **(전세사기 예방)** **[신규]**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* 역할 강화,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**('26.上.)
 - * 서울, 인천, 경기, 부산, 대전, 대구 6개 지역 설치
 - **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,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·컨설팅
- **[신규]**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를 확대*하여 임대인-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('26)
 - * 임대인 동의 없이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, 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 대장 추가 등
- 임대인 변경에 따른 임차인 통지 의무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지속 추진, 사회초년생 대상 예방교육 확대 추진
- **(전세사기 피해지원)**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 피해자 구제 강화*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
 - *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,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 지원, 피해자 직접매입 개선 등

- **(찾아기는 청년 주거상담소)** 청년센터·대학교 등에 직접 방문, 공공주택, 부동산 계약,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 및 정보 전달
* ('26) 전국 각 지역 청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
- **(주거품질 상향)** 반지하, 쪽방촌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 등의 공공·민간임대 주택으로의 이주·정착 적극 지원*
* (예)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 제공 및 이주비 및 저리 정책대출 지원 강화 등

3.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

①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·과기부

- **(국가장학금) 9구간 이하(전체 10구간) 대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학비 부담 완화('26. 약 125만명)**
- **확대** 1~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~40만원 인상('25. 下~)

<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(단위:만원)>

구분 (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)	기초차상위 (수급기준)	1구간 (~30%)	2구간 (~50%)	3구간 (~70%)	4구간 (~90%)	5구간 (~100%)	6구간 (~130%)	7구간 (~150%)	8구간 (~200%)	9구간 (~300%)	10구간 (300%~)
I 유형	전액	570 → 600			420 → 440			350 → 360		100	미지원
다자녀 첫째둘째 셋째이상		570 → 610			480 → 505			450 → 465		135	
		전액									

- **(인문계 대학생 등 지원) 확대 ▲인문사회계* 우수학생 ▲고졸 재직 대학생** 등 다양한 청년 상황에 맞춘 등록금 지원 강화**
* 인문100년 장학금(신규 선발인원) : ('25) 1,500명 → ('26) 2,000명
** 희망사다리장학금 II 유형(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, 신규) : ('25) 4,000건 → ('26) 5,000건
- **(이공계 대학원생 지원) 확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*, 이공계 석·박사 우수장학금**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**
* ('25) 215명 → ('27) 595명 → ('30) 1,000명 ** ('25) 1,000명 → ('27) 4,500명 → ('30) 9,000명
- **확대** 이공계 대학원생의 보편적 경제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확대*
* ('25) 35개교 → ('26) 50~60개교

- **(학자금 대출)** **확대**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*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**으로 확대('25. 약 20만명 → '26. 약 30만명)

* 일정 소득 이상('25. 2,851만원)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학자금 대출(금리 1.7%)

** (현행) 학부생 9구간, 대학원생 4구간 → (개선) 학부생·대학원생 10구간(전구간)으로 확대

- **확대**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확대(4 → 6구간)
- **확대**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면제 대상 확대(5 → 6구간)

<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(안)>

구분	신청대상				이자면제	
	학부		대학원			
	등록금	생활비	등록금	생활비	대상	면제기간
현행	9구간	8구간	4구간	4구간	1~5구간	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기준소득('25년 2,851만원) 발생 전까지
개선	10구간	8구간	10구간	6구간	1~6구간	상환기준소득('25년 2,851만원) 발생 전까지

②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농식품부

- **(천원의 아침밥)** **확대** 대학생 대상 '천원의 아침밥' 지원규모 지속 확대*

* ('25) 연 450만명 → ('26) 연 540만명

- **(직장인 든든한 한끼)** **신규**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 대상 식비 보조 시범사업* 추진으로 외식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식습관 지원

* (아침) 자부담 1천원에 쌀·쌀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아침식사 제공(4천여명)
(점심) 점심시간(11~15시)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% 할인 지원(5만명)

- **(농식품 바우처)** **확대**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* 대상 맞춤형 농식품 지원 신설(1인가구 월 4만원, 4인가구 월 10만원)

* ('25) 임신부·영유아·아동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→ ('26) 청년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추가

③ 청년 교통비 부담 경감^{국토부}

- **[신규]**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을 대상으로 5.5만원으로 대중교통(지하철·버스)을 월 2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'대중교통 정액패스' 신설
 - * ▲ 지하철·버스 : (청년·어르신·다자녀·저소득) **5.5만원**, (일반) 6.2만원
 - ▲ GTX·광역버스 포함 : (청년·어르신·다자녀·저소득) **9만원**, (일반) 10만원
- 기존 **K-패스***도 유지하여 대중교통 지원의 선택권 확대
 - *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정기이용시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최대 30% 환급

④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^{문화부}

- **[확대]**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 예술패스의 지원 연령·지원금액(비수도권)·사용분야 확대*
 - * ▲ 연령 : ('25) 19세, 16만명 → ('26) 19~**20세**, 28만명
 - ▲ 사용분야 : ('25) 공연·전시 관람 등 → ('26) **영화 추가**
 - ▲ 지원금액 : ('25) 최대 15만원 → ('26) 수도권 15만원, **비수도권 20만원**

⑤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^{복지부}

- (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) **[신규]**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시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
 - ※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, 청년들이 조기에 가입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
- (군 복무 크레딧 확대) **[확대]** 국민연금 '군 복무 크레딧'의 가입 인정 기간을 ^{현행}6개월 → '26년 이후 ^{최대}12개월로 확대
 - 향후 '군 복무기간*' 전체로 확대 추진(법개정 필요)
 - * 육군·해병대 18개월, 해군 20개월, 공군·사회복무요원 21개월

⑥ 청년 장병 통신비 부담 경감^{과기정통·국방부}

- **[확대]**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(현재 20%)을 확대를 추진하고, 잔여 데이터 이월 및 데이터 선물하기(현재 월 2GB) 혜택 강화

4.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

① 고립·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국 확대^{복지부}

- (조기 발굴) 위기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('26, 3년 주기),
[신규]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립·은둔 위기군 조기발굴('27)
- (맞춤형 지원) **[확대]** 고립·은둔청년 맞춤형 상담 및 정책연계* 등 일상회복 지원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(연 200만원) 지급 전국 확대
 - * 공동생활프로그램, 일경험 프로그램(가상회사)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,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
- (지원체계 확산) **[확대]**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단계적 전국 확대*('25. 4개소)를 통해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
 - * ('26) 청년미래센터 4개소 추가 개소 예정 (총 8개소)
- (지역·민간 연계) **[신규]** 고립·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민간 전문기관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지원을 통해 자율적 확산 도모

②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^{복지부}

- (맞춤형 지원) 자립수당(50만원, 5년간)·자립정착금(1,000만원 이상) 등 경제적 지원 및 전국 17개 시·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반 맞춤형 사례 관리 강화*
 - * 유형(자살위험 등)·이슈별(취업, 정신건강 등)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('26) 등을 통해 심리·정서 위기 대응능력 제고
- (자립역량 교육) 자립 초기에 청년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재무설계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자립역량 교육* 활성화 추진
 - * 경제·금융 관계부처(기재부, 금감원 등) 협력 기반 자립준비청년 특화 경제 교육 과정 개발 및 오프라인 기반 재무설계·교육 확대('26)

③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 신설^{노동부}

- **[신규]**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 청년*(200명)을 대상으로 기초소양·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신설(참여수당 20만원 지급)
 - * 지능지수(IQ) 71~84로서 지적장애(IQ 70 이하)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·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, 학습·사회참여·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

4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^{여가부}

- 청년 1인가구 심리·정서상담, 자기개발·관계개선 교육* 등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, 교류·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프로그램 내실화
 - * (예) 사회진입 예정자 독립생활 준비교육(정서·경제·생활유지 등), 원가족과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, 금융·생활 기술, 문화·예술·체육 참여형 프로그램 등
- **확대** 청년 1인가구 가족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약·위기가족 지원사업 운영센터 단계적 확대*
 - * 취약위기가족 지원 : ('25) 227개소 → ('26) 233개소 → ('27~) 단계적 운영 가족센터 확대

5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^{여가부}

- **확대**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(25~34세)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금 인상*
 - * ('25) 자녀 연령별 5~10만원 → ('26) 10만원 추가지급 (총 월33만원)

6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^{복지부}

- ※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(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'25.4~12)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
- (분리 지급) **신규**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~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*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적용 실시
 - * (현행) 3인 가구(부모2+청년1)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(가구주)에게만 지급 → (개선)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,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
- ※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분리 지급중('21~)
- (개별가구 요건 개선) **확대** 부모와 독립한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와의 단절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, 수급신청이 곤란하지 않도록 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* 검토
 - * (현행) 개별가구로 생계수급을 받기 위해서는, 기준 중위소득 50% 이상의 소득, 기타 가정폭력 등 별도가구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에 가능 → (개선)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재, 가족관계 해체 등 요건 확대 및 구체화
- 분리 지급, 개별가구 인정요건 개선 모의 적용* 실시('25.9~'26.2), 이후 성과평가·보완을 통해 제도화 검토
 - * 인천 계양구, 대구 달서구, 강원 철원군, 전남 해남군 4개 지자체 실시

5.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

① 청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^{복지부}

- **(검진·관리)**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(10→2년)을 통해 우울증·조기정신증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(‘25~)
 - * (기존) 우울증 검사, 10년 주기 → (개선) 우울증·조기정신증 검사, **2년 주기**
-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으로 ▲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▲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* 지원사업 연계(‘25~)
 - * 심리검사 및 대상자의 상황·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1: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(8회)
- **(심리상담 바우처)**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청년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로 지원 강화(‘25~)
- **(위험요소 관리)** 마약류·알코올 등 중독성 정신질환 대응 강화를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실화(‘25~)
 - *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: 중독여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지원(‘25. 31개소)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: 알코올, 마약 등 다양한 중독문제 예방, 상담, 치료연계 등(‘25. 63개소)

② 청년 자살예방 지원^{복지부}

- **(SNS상담)** **[신규]** 고립·은둔 청년층 대상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선제적·지속적 말벗* 역할 제공,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 예방(‘25.10)
 - * 동일 상담사가 매주 동일 시간대에 약 1,300명 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
- **(전화상담)** **[확대]** 지속 증가 추세인 상담 수요 대응을 위해 생명존중 희망재단 내 자살예방상담전화(109) 콜센터 확대(2센터 개소, ‘25.10)
- **(AI 도입)** **[신규]** AI 활용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살예방상담 중 위기신호 조기 발견 시스템 개발 추진(‘25.下~)

3 사회 참여

- ❖ 청년이 **정책·사회의 주체**로 **활발히 참여**할 수 있도록 **정책 참여 시스템**을 강화하고, 이를 지원하는 **청년정책 인프라·제도 기반 개선**

1.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

①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 당사자성 확대^{국조실}

- (청년과의 국정대화) **[신규]**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이슈를 토론·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·소통 플랫폼 운영

-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 : 다양한 청년과의 토론·간담회 개최(9.19)
-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·2·3 (K-토론나라) : 1차 청년 참여(7.24), 2차 청년 문화 예술(9.10)
-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: 중·장기적 사회이슈를 청년 관점에서 숙의

- (참여의제 확대) **[확대]** 교육, 출생, 일자리, 국민연금,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한 청년입장 반영 노력 및 지원*

* 주요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및 청년위원 추천, 청년위원 정책 지원 등

- (청년총회) 일자리·주거·교육·복지 등 핵심 사회의제를 청년들이 직접 토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* 마련, 전국 주요권역 순회 개최 추진

* 주제별 강연, 심층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 연중 개최 ('25년 주제: 창업, AI교육, 저출생 등)

②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^{국조실}

- (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) **[신규]**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·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*(6개 분과, 60여명) 설치·운영

* 6개 분과 : ▲일자리 ▲교육 ▲주거 ▲생활 ▲참여·권리 ▲기획·균형발전

- 분과별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·제안하고 소관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정책 반영

- **(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*)** 분야별·부처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 반영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

*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채용 및 운영 중

- **(청년 위촉 정부위원회)** **[확대]**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세대인 청년의 참여 확대*

* '25년 기준 청년 위촉 정부위원회 227개 : 청년위원 위촉 비율 10% 이상

- 청년위원의 참여경험 확대·축적 및 향후 경력 활용 등 지원

2. 온·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체감도 강화

①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(온통청년) 고도화^{국조실}

- **(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)** **[신규]** AI·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·소득·지역 등을 입력하면,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·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 구축

- **(통합상담시스템 구축)** **[신규]** 챗봇, 검색, 상담 등 축적된 개인의 상담 이력을 활용한 상담을 제공하여 맞춤형·쌍방향 시스템 마련

- **(정책정보 통합 제공)** **[확대]**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플랫폼과 온통청년의 자동 연계를 통해 정보누락 방지, 신속한 현행화 등 신뢰성 확보

- **(온라인 소통 확대)** 정책제안을 위한 온통청년 內 청년신문고 활성화, **[신규]** 온라인 투표 기능* 신설 등 청년세대 소통 기능 강화

* 청년정책 선호도 파악 및 청년세대 의견 수렴 등 활성화

- 청년정책 공모전*을 통해 일반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도 확산 추진

* '25.7월중 1,800여건 청년 정책제안 공모 완료, 예비심사 등을 통해 400여건 검토중

②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국조실

- (통합 전달) **확대** 지역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 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
 - * 청년미래센터, 대학일자리+센터, 고용복지+센터 등과의 연계·협업체계 모색
- (지역특화) **확대**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는 지역특화 청년사업 발굴을 확대하고, 전국으로 확산 추진
 - * 기초 → 광역 → 중앙 청년지원센터 간 상향식(bottom-up) 제안체계를 확대하여 기초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, 청년지원사업에서의 청년 당사자성 확보
- (청년공간 지원) **확대** 지역 청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청년 교류 및 교육 등을 위한 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청년의 활력거점공간 제공

③ 청년연령 관련 법령 정비 국조실·노동부

- (청년연령 기준 검토) **신규**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추세 및 지자체 조례·타법령 규정 등을 고려하여 청년연령 기준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 등 검토
 - ※ 현재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,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,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 (지자체 조례 : 39세 이하 또는 45세 이하)
- (관련법령 정비) **신규**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상 청년연령(현행 15~29세) 상한을 「청년기본법」과 동일하게 상향(29세 → 34세) 추진('25.下)

3.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

① 청년 지역공동체 지원 강화 행안부

- **신규** 산불재난지역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복구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범 추진*('25.9~12)
 - * 지자체·피해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재난지역에서 활동할 10개 청년단체 선정 및 활동 지원(청년공동체당 1,500만원 지원)

② 청년마을 사업 활성화^{행안부}

- **(전국 확산)**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·운영하는 **청년마을***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청년 지역 유입과 공동체 회복 지원
 - *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(지역탐색), 일거리 실험(특산물·관광 등 지역자원 활용), 청년 활동공간(사무실, 숙소 등) 확보 및 행사(주민 교류) 등 기획·운영
- **(지역문제 해결)** 지자체·주민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지역문제(환경정비, 아이돌봄, 노인 복지 등) 등을 해결하는 지역 선도 청년공동체 활동 추진
- **(민간연계·성장)** 민·관 협력 및 비즈니스 연계*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모델 구축, 청년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‘상호 성장의 장’ 마련
 - * ▲지역자원 활용 생산품 등의 코레일 매장 유통 지원 ▲삼성생명㈜, 새마을금고, 한국공항공사 등 ESG-EAP 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거리 창출·관광상품 개발 등

③ 성별 인식격차 해소방안 마련^{여가부}

- **(개선과제 발굴)** **[신규]** 청년이 인식하는 차별·불이익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안 검토*
 - * (예)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직종·직무 분리 완화, 일·생활 균형 위한 조직문화 개선,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의 원활한 활용 등
- **(소통채널 마련)** **[신규]** 소통·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의견 청취 및 남녀 상호 간 이해의 폭 증진

IV. 향후 계획

1. 청년 참여를 통한 과제 구체화 및 보완

- 다양한 청년과의 의견 수렴·협의를 통해 세부 정책 추진방향 및 계획,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·보완(9~11월)
- ▲청년정책 공모전 ▲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모 정책제안서 ▲청년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·반영 추진
-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청년 주도의 공론장 마련을 위해 ‘청년 라운드테이블’* 구성·운영중, 이를 통해 세부방향 논의·검토
- * 청조위원, 지방 청조위원, 청년단체, 일반청년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중점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등 검토·논의중(8.20~)

2. 「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6~’30)」 수립

- 청년 의견을 반영한 신규 과제, 개선·보완사항, 세부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「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6~’30)」 수립 추진(12월)
- 청년 라운드테이블 운영, 범부처 TF 등을 통해 청년 및 관계부처 협의·조정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초안 마련(11월)
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및 확정(12월)

3. 「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 반영을 통해 성과 점검·관리

- 「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6~’30)」을 기반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「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」 수립(‘26.3월)
- 분야별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 점검·관리 및 평가(‘~’26.12월)

추진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사회 진입		
①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'괜찮은 일터' 확산		
▶ 신규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 정보 제공	노동부	'26
▶ 신규 청년 대상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제공	노동부	'25.9
▶ 신규 영세기업 대상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	노동부	'26
▶ 중소기업 일터 안전 강화 지원	노동부	'25~
▶ 신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	노동부	'26.상
▶ 신규 플랫폼·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및 통계청 정규 통계 편입	노동부	'26
▶ 신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 실시	노동부	'26.하
▶ 문화선도산단을 통한 청년친화 산단조성 (25. 3개소)	산업·문체부	'25~
③ '쉽'에서 '회복'으로, '회복'에서 '재진입'으로의 기회 마련		
▶ 확대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및 위험군 선별	노동부	'26.상
▶ 신규 온라인 오프라인 1:1 접촉 추진	노동부	'26
▶ 신규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+센터 10개소 지정·운영	노동부	'26
▶ 신규 사회연대경제·공공부분을 통한 포용적 일경험 활성화	노동부	'26
▶ 신규 고용센터 심리 상담 강화(청년 신속 지원, 협업체계 구축 등)	노동부	'26
▶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 확대('26. 60만원)	노동부	'26
▶ 신규 청년 자발적 이직자 대상 구직급여 생애 1회 지급	노동부	'27
▶ 신규 규모·업종별 임금분포 등에 기반한 경력 설계 지원	노동부	'27
▶ 신규 AI 1:1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	노동부	'25.9
②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·교육의 질 제고		
▶ 신규 AI·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 직업훈련·일경험·채용 연계 강화	노동부	'26
▶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기업 맞춤형 훈련·채용 지원('25. 76개소)	노동부	'25~
▶ 신규 AI·SW 중심대학 신설 (AI중심대학 10개, SW중심대학 51개)	과기정통부	'26
▶ 신규 AI 단과대학 신설	교육·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('26. 88개교)	교육부	'26
▶ 신규 AX 대학원 설치('26. 10개)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('26. 100여명)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생성 AI 선도 인재양성('26. 216명)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K-디지털 트레이닝('26. 5만명)	노동부	'26
▶ 확대 AI·SW 마에스트로('26. 450명)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AI 이노아카데미('26. 1,200명)	과기정통부	'26
▶ 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('26. 10만명)	중기부	'26
▶ 확대 재직자 AID 집중과정('26. 38개교)	교육부	'26
▶ 근로장학금 제도를 통해 청년의 AI 교육현장 지원	교육부	'25~
▶ 신규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추진	노동부	'25.하
▶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·운영	국조실 등	'26
▶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·운영	기재부	'26~

추진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▶ 확대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('26. 10개교) 확대	교육부	'26
▶ 표준 현장실습 제도 개선	교육부	'25.12
▶ 확대 한-미 첨단산업 청년인력교류('26. 540명)	산업부	'26
▶ 확대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원 확대('26. 6개소 추가 지정)	산업부	'26
▶ 신규 산학프로젝트 지원 사업 신설('26. 100명)	산업부	'26
▶ 신규 3+1 전문학사 교육경로 마련('26. 5개교 지원)	교육부	'26
▶ 신규 2+3 마이스터 학사 신설	교육부	'27
▶ 확대 군 장병 AI·SW 온라인 교육 확대('26. 47만명)	국방부	'26
▶ 확대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('26. 4만명)	국방부	'26
▶ 신규 군 장병 맞춤형 e-북 지원 신설	국방부	'26
④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		
▶ 확대 청년창업사관학교 內 딥테크 글로벌 심화과정 신설('26. 300개)	중기부	'26
▶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및 딥테크 창업기업 지원('26. 40개사)	중기부	'26
▶ 확대 창업탐색교육 확대('26. 247팀)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소득세·법인세 감면 확대	기재부	'27~
▶ 확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강화 및 지역센터 확대	과기정통부	'25~
▶ 전업 크리에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기업 육성	과기정통부	'25~
▶ 신규 창업루키 프로젝트 추진	중기부	'26
▶ 신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	중기부	'26
▶ 신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 신설	중기부	'26
▶ 확대 재창업 청년 대상 예비창업 지원사업 1회 추가 지원 허용	중기부	'26
▶ 신규 재도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근거 마련(창업지원법)	중기부	'26
▶ 신규 중장년과 청년의 공동창업 지원확대(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요건 개선)	중기부	'25
⑤ 청년의 다양한 분야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		
▶ 신규 K-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('26. 3,000명)	문체부	'26
▶ 신규 K-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('26. 1,000명)	문체부	'26
▶ 확대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 확대	농식품부	'26
▶ 확대 청년 농촌보금자리 지원 확대('26. 32개소)	농식품부	'26
▶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우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	농식품부	'25~
▶ 신규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	농식품부	'28
▶ 확대 청년바다마을 확대('26. 6개소)	해수부	'26
▶ 확대 청년 어업인 대상 어촌 정착자금 지원 확대('26. 420명)	해수부	'26
▶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	해수부	'25~'27
▶ 신규 대학 「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」 마련 및 「진로교육 현황조사」 개편	교육부	'26.12
▶ 신규 갭이어 지원방안 검토	국조실 등	'27
⑥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		
▶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('26. 5만명)	노동부	'26
▶ 참 관창은 강소기업 선정 및 취업연계	중기부	'25~
▶ RISE 체계를 통한 청년 지역인재 양성	교육부	'25~
▶ 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지원	복지부	'25~
▶ 확대 청년친화도시 확산('26. 3개 신규 지정, 누적 6개)	국조실	'25~

추진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2. 자립기반 마련		
①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		
▶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	금융위	'26.6
▶ 신규 군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	국방부	'26.3
▶ 신규 자산형성 연계 강화	국조실 등	'27
▶ 확대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	금융위	'26
▶ 청년 대상 경제·금융교육 확대	기재·교육부	'26~
②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		
▶ 확대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	국토부	'26
▶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(주거안정장학금) 지원('26. 2.1만명)	교육부	'25~
▶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(버팀목 대출) 지원	국토부	'25~
▶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급	국토부	'25~
▶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	국토부	'26
▶ 신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	국토부	'26.상
▶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전 접근 정보 확대	국토부	'26
▶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	국토부	'26
▶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 운영	국토부	'25~
▶ 주거 취약청년 등의 주거품질 상향 지원	국토부	'26
③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		
▶ 확대 국가장학금 1~8구간 지원금액 인상	교육부	'25.하
▶ 확대 인문100년 장학금 확대('26. 2,000명 신규 선발)	교육부	'26
▶ 확대 희망사다리장학금 II유형 확대('26. 5,000건 신규 지원)	교육부	'26
▶ 신규 장애대학생 장학금 지원	교육부	'27
▶ 확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이공계 석·박사 우수장학금 확대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	과기정통부	'26
▶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(학부생·대학원생)	교육부	'26
▶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중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확대(대학원생)	교육부	'26
▶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이자면제 대상 확대	교육부	'26
▶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	농식품부	'26~
▶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 신설	농식품부	'26
▶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청년 포함 생계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	농식품부	'26
▶ 신규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	국토부	'26
▶ 확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	문체부	'26
▶ 신규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	복지부	'27
▶ 확대 군 복무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래딧 확대방안 마련	복지부	'28
▶ 확대 청년 군장병 통신비 부담 경감	과기정통부	'26

추진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④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		
▶ 고립·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실태 정기 조사	복지부	'26
▶ 고립·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공공데이터 활용 조기발굴	복지부	'27
▶ 확대 고립·은둔청년 맞춤형 상담 및 정책연계	복지부	'25~
▶ 확대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단계적 전국 확대('26.8개소)	복지부	'26~
▶ 확대 고립·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기관 단계적 전국 확대('26.8개소)	복지부	'26~
▶ 신규 고립·은둔청년 지원 지역 민간 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및 지원	복지부	'27
▶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	복지부	'25~
▶ 자립준비청년 대상 재무설계 및 경제위기 대응 등 자립역량 교육 활성화	복지부	'26~
▶ 신규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자립 지원 사업 신설	노동부	'26
▶ 확대 청년 1인가구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실화 및 지원센터 확대	여가부	'26
▶ 확대 청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확대	여가부	'26
▶ 신규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	복지부	'25.9~
⑤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		
▶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강화 및 연계 지원	복지부	'25~
▶ 자립준비청년 등 대상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	복지부	'25~
▶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실화	복지부	'25~
▶ 신규 고립·은둔 청년층 대상 SNS 상담 제공	복지부	'25.10~
▶ 확대 자살예방상담전화 콜센터 확대	복지부	'25.10~
▶ 신규 AI 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개발	복지부	'25.하~
3. 사회 참여		
①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		
▶ 신규 청년과의 국정대화·소통 플랫폼 운영	국조실 등	'25~
▶ 확대 청년 참여의제 확대	국조실	'25~
▶ 청년총회 운영	국조실	'25~
▶ 신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	국조실	'25.하
▶ 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 제도 개선	국조실	'26
▶ 확대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 확대	국조실	'25~
② 온·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체감도 강화		
▶ 신규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(온통청년) 고도화(맞춤형 정책추천 등)	국조실	'26
▶ 신규 온라인 소통 확대(청년신문고, 투표 기능 신설, 청년정책 공모전 등)	국조실	'25.하
▶ 확대 지역 청년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개편	국조실	'26
▶ 확대 지역특화청년사업 발굴 확대	국조실	'25~
▶ 확대 청년공간 지원 확대	국조실	'26
▶ 신규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 기준 연구 및 사회적 논의	국조실	'26
▶ 신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 정비	노동부	'25.하
③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		
▶ 신규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	행안부	'25.9~12
▶ 청년마을 모델 지역 확산 및 민간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	행안부	'25~
▶ 신규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소통의 장 마련	여가부	'25~